

새미래, “오픈 프라이머리 전면 도입”

“국회의원 큰 특권 선거법 공천권 특권 내려야야” 정치 대혁신 공약 발표 “국민 참여 공천 통해 당대표 패권공천 막아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헌 제안도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제3기 새미래 대표인 김중민이 1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전면 도입을 내세운다. 이어 “7공화국 체제 출범”을 위한 개헌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중민 새미래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은 선거법 특권과 공천권 특권으로, 이를 내려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정치 대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김중민 상임선대위원장은 “공천 제도를 바꿔야 한다. 현재의 중앙집권적 당 대표 공천 제도로는 당 대표 개인 패권 공천을 막을 수 없다”며 “국민 참여 공천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에선 기본 검증만 하고 1차 예비 선거에서 상위 2명을 선발해 결선 투표를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전면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미래, 의원계-정부 대타협 촉구 서한 전달. 오영환 새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사친 가운데)과 김중민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19일 오전 '의원계-정부 대타협'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 위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미래, 민주 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선진화위원회, 민생대타협위원회, 국가미래위원회 등 ‘정치대혁신 3대 위원회’ 설치를 함께 제안했다. 그는 특히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선진화위원회에서 선거제, 국회의원 세비 등 국회의원 기득권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의결하는 ‘생선가게 고양이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은 7공화국 체제 출범을

위한 권력구조 개헌 방안으로 중앙집권 대통령제 폐지를 위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부총리 국회 추천제, ‘비서실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 전환을 위한 국무총리 및 4명의 부총리로 구성된 총리위원회 구성,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등을 제안했다. 자치 입법권·자치 재정권, 자치 조직권을 담은 자치분권 개헌 및 국민 생활 기본권과 민생 국가책임

조항을 신설하는 민생 개헌도 주장했다. 한편, 김중민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영환 총괄상임선대위원장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의원계-정부 대타협’을 구성하고 향후 10년 의대 정원을 매년 15~20% 늘리는 안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타협을 이루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특별취재반

황배연 김제시의원 “공항부지 활용방안 적극 모색해야”

김제시의회 황배연 의원은 19일 제276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시의 적극적인 공항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이날 황배연 의원은 김제시공항은 김제시민들의 아픈 손가락 중 하나라고 발언하며 2001년 김제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도내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감사단 감사로 인해 2005년 이후 공사가 중단되고 2008년 7월 공항 건설 계획이 취소된 바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현재 농작물과 전북자치도,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조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배연 의원은 집행부에 “김제시 공항부지에 전북의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 촉진,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첨단지식산업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다양한 논리 개발과 정책 개발을 통해 20여년째 불모지로 방치되어 있는 공항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

남원시의회(의장 정경기)는 제263회 임시회를 19일, 15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19일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김한수 의원, 소태수 의원, 이기열 의원, 이숙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어 남원시 예산결산 및 낭비사태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추진할 것”

민주 이성운 예비후보, 첫 지역 공약 발표 중앙 공약으로 “윤석열·한동훈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예비후보(전주)가 19일 첫번째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 민주당의 새 얼굴을 기치로 내건 이성운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사였던 제가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됐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발표하러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반드시 수행하는 진짜 정치인이 될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중앙 공약으로는 “이번 선거는 무도한 윤석열 검찰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괄하는 ‘김건희 종합특검’을 관철하겠다. 동시에 윤석열·한동훈 특검법’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민의 편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하겠다”며 “공포의 상징이 되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제도를 확 바꾸겠다. 내가 재판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영장제도를 개선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공수처의 예산과 인력을 서울중앙지검 수준으로 늘려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예산과 인사에서 전북의 ‘뿔’을 제대로 확보하겠다”며 “잘 싸우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가예산 12조원 시대를 열겠다. 그리해 전북발전을 이끌고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이성운 예비후보는 지역 공약으로 먼저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을 추진하

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헌법재판소를 전주에 이전해 사법 인력이 전주에 모이게 하겠다. 전주가 헌법정신이 흐르는 사법수도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또한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전주 서부권 주차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우선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개방해 시민과 교통을 분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면도로의 통행환경 개선으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겨 주차난 해소의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예비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40~50%까지 확대, 전주-13개 시군 전북관광벨트화 등을 내걸었다. 이 예비후보는 끝으로 “기후위기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민생경제, 어르신, 여성, 청년, 장애인, 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 전북특별자치도의 알찬 성장 등에 관한 공약은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특별취재반

국민의미래 비례 ‘전북 0명’... 국힘 전북 후폭풍 커지나

“국힘 취약지역 우선추천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전북 출마 국힘 후보자 출마 포기까지 고민 중”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전북출신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전북도당 내에서 불만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당헌 당규에 정해진 우선추천제도가 저 무시되고 있어 출선 출마자의 포기까지 제기되는 등 반발 모양새가 심상치 않다. 22대 총선 전주에 출마한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19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정책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짧은 공약 발표 시간을 할애한 후 전남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발표와 관련해 작성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취약지역 인재육성 비

례대표 국회의원 우선추천제도’는 제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있을 때 호남 인재를 육성하고 호남 유권자들에게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힘써 이루어 낸 제도’라며 “어제 발표는 당규에 따라 호남 후보자가 당선권에 우선추천 되었어야 하나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는 당 소속 국회의원 85명의 동의를 받아 비대표 의결을 거쳐 상임집행위원회 의결로 결정된 사항이다”라며 “호남이라는 보수의 불모지에서 헌신해온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의 배제는 국민의힘이 전

국정당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운천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전북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자들 모두가 출마 포기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어제) 당 지도부에 당력히 문제 제기를 한 만큼 하루빨리 바로 잡아주시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 “말고 있는 국민의힘 호남총괄위원장 역시 말을 잃어 버렸다”면서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는 만큼 당의 빠른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전북의 경우 국민의미래 비례후보에 조배숙 전 도당위원장과 허남주 전 전주갑 당협위원장, 정선호 전주부영 당협위원장, 김경민 전 전주시장 후보 등이 도전했지만 당선권인 20위에는 물론 35명 안에도 들지 못했다. /뉴시스

21~22일 총선 후보자 등록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에 전북선관위 “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오는 21~22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당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

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계승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정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다만,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 같은 의석수를 가진 경우 그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한편, 5명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투표시스템(Info.nec.go.kr)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채납사항,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4월 1일부터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을 통해 공개한다. /특별취재반

지역방송발전 지원 근거 마련

전북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 발의 조례안 가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조례안은 최근 급격히 미디어 환경변화와 재정 악화까지 더해져 지역방송의 위기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방송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지역방송 발전기반 조성사업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지역사회 현안 및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제작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원사업, 제작 프로그램 흥

보, 재원조달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2014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이제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역방송의 콘텐츠를 강화해 지역방송의 주체이자 수혜자인 지역민과 소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방송 발전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KBS전주, 전주MBC, JTV, TBN전북 교통방송, CBS전북, FEBC전북교통방송, BBS전북불교방송, WBS전북원방송 등 8개 방송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재훈 기자

웰니스 관광 육성·지원 근거 마련

전북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 발의 조례안 가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 407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의 웰니스 관광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전북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

정함으로써 전북자치도민의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전북자치도가 웰니스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행정책·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웰니스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웰니스관광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웰니스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북자치도 웰니스관광 관련 기업·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훈 기자